

# 지금 國監에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주요 이슈로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엉터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엉터리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둘째날 질의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 실태가 겉

부 지자체에서는 이에 미달되는 3~4%의 인상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2005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 등에 따라 지역 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는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직이 늘어남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한국 21이나 비전 2030 계획 등 복지선진화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조적 모순을 전면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제언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기본급이 최소한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7급 수준으로, 원장은 6급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경력과 직급에 따른 호봉간 급여 상승분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추후 인상개선 활동을 적극 지지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의지를 모아 급여수준 현실화 추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화원 의원 홈페이지에는 정화원의원의 이번 활동에 대한 지

## 2006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홍) 소속 의원 활동 활발 정화원 의원(한나라당)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과 관련 강력 질책

돌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임금 인상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처음 입사한 경우의 기본급과 9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호봉 기본급을 대비한 결과 97.2%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10년간 근무하였을 경우 84%, 15년 근무의 경우 67%의 격차를 보였다. 또 보건복지부는 매년 5~6%의 기본급 인상안을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지방 이양된 지난 2005년의 경우 전북, 강원, 전남 등 일

지의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그 동안 정말 열정을 가진 많은 동료·선배들이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직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지켜보아야 했다. 젊은 날을 바친 사회복지 현장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떠나는 동료들이 더 이상 없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류시혁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인의 현실을 알고 대변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며 단순히 인기적 행동이 아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노력 부탁한다”고 지지하였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연금급여 안주면서 보험료만 떼서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연금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급자 현금급여액 중 국민연금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연간 43억원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현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현금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부분과 타법지원부분을 제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는 일반일을 대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현물급여 지원이 되거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경우 현물급여나 타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일괄 공제되고 있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TV 수신료, 전화요금 등이 기초수급자에게는 면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제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1인 가구 3,603원, 4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10,197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차감되는 금액은 2005년 한 해 43억 4천 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평생 수급자로 남아있거나, 노후준비는 필요없다는 입장인가 의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공제한 만큼 연금 노후소득보장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  
정부가 취업시킨 장애인 중 57% 중도탈락



장향숙 의원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정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취업시킨 장애인은 총 3만1,326명이며 이 중 57%에 해당하는 1만7,936명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한 2만1,403명의 장애인 중 60%인 1만2,829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100인 이하 사업장 취업자 2,679명 중에서는 1,623명이 퇴사하여 61%가 직장을 관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하 사업장에 입사한 2,555명 중에서는 1,341명(52%)이 직장을 관뒀고, 50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한 1,582명 중에서는 801명(51%), 5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 3,107명 중에서는 43%인 1,342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퇴직자 1만7,936명의 취업기간을 보면 전체의 63%에 해당하는 1만1,344명이 3개월 안에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03명은 직장을 채 한달도 못다니고 퇴직해, 전체 취업장애인 4명 중 1명은 직장에 취업을 해도 한 달도 못버티고 그만두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 장애인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1개월 이하가 8,103명, 2개월 이하 1,877명, 3개월 이하 1,364명, 6개월 이하 2,487명, 9개월 이하 1,409명, 1년 이하 1,003명, 2년 이하 1,424명, 3년 이하 252명, 기타 17명 등이다.

장향숙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퇴직자 발생시 현장실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직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취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전 상담서비스와 직업능력평가를 내실있게 진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SN**